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9
----------	-------

발의연월일 : 2021. 7. 14.

발 의 자 : 노웅래 · 한준호 · 이병훈
이해식 · 홍성국 · 송옥주
용혜인 · 임종성 · 장경태
양기대 · 임호선 · 이수진^(비)
김민철 · 이용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동물원·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시행('16년~) 이후 동물원·수족관이 국가 관리체제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벨루가 등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수족

관의 허가 기준(동물종별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전시 부적합종 도입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안 제1조)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도입(안 제7조)

1)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함.

2) 따라서 기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마.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안 제9조 및 제10조)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동물원·수족관 검사관 도입(안 제11조)

동물원·수족관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안 제12조)

- 1) 기존 규정은 6개월 이상 휴원 시 휴원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2) 따라서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

아.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4조)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17.12.12, 자구조문체계 정비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
- 2)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 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저해 행위를 제한함.
- 3)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 4) 전시 부적합종(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

사 또는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중)의 동물원·수족관 도입을 금지함.

자. 동물원·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 마련(안 제15조).

차.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6조)

1)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2)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 의무 부과(안 제19조 및 제20조),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카.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타.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운영(안 제23조 및 제2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질병·안전관리, 종보전연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권역별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안 제25조)

하.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정비(안 제29조 및 제31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동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동물 또는 담수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동물 또는 담수동물 등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4. “해양동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5. “담수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동물을 말한다.

6.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과 시·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7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

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각각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제9조제2호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허가권자는 제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동물원·수족관 검사관)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한 현장조사
2. 제21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물원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 환경부장관
2. 수족관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 해양수산부장관

③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

· 설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시설·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 검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을 폐원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금지 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포획·격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질병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유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보유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

3. 보유동물 질병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4. 보유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관리청장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중,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원·수족관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 시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수의사(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 시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육사
3. 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 그 밖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동물원·수족관에 대한 점검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제14조 위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치명령)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3조(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거점동물원·수족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검역 지원
3.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4.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증식 프로그램 운영
5.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의 보전·복원 및 관련 조사·연구
2. 야생동물 등의 생태·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홍보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29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9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6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2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